

이슈와 정책

제36호

2021. 5. 10.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요약 ■

코로나 19로 4차산업혁명이 촉진되고 국가간 주도권 경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 성장, 소멸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R&D의 역량은 높으나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이 원활하지 않고 실패율도 높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이나 산업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 창업의 경우 실패 시 발생하는 삶의 위험이 커 도전적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창업의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지 못해 실패확률이 높다. 실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 구조조정도 장기화된다. 이 문제 모두 삶의 안정성이 떨어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아 도전의 실패와 실업에 대한 공포가 낮은 프랑스, 북유럽국가들의 창업 열풍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냉혹한 혁신의 파괴적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필자의 견해는 본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주도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확보가 중요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공유경제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급격한 질서의 변화는 후발자에게 기존 질서의 주도국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마련이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는 셈이다. 여기서 승패는 누가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빠르게 적응하는가로 판가름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도자가 되던가 아니면 적응에 도태되어 계속 추격자로 남게 된다.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역동성이다. 한 나라의 산업이 역동적이라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창업, 성장, 소멸 또는 구조조정의 과정이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며 한 국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산업역동성, 창업, 성장, 구조조정 모두 부진

그럼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국의 산업 역동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창업 부문이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R&D 역량이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2018년 기준으로 GDP대비 4.5%로 OECD국 평균인 2.4%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특허 출원 건수도 GDP규모로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의 혁신역량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아 2021 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R&D가 창업 또는 신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률(창업기업수/총활동기업수 × 100)은 약 15% 수준으로 표면적으로 OECD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89%가 1인 기업이고, 창업기업의 21%만이 사업적 기회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창업의 대부분이 R&D에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존형 창업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시작한 기업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선진국의 경우 50% 이상이 사업적 기회를 가지고 창업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실질적 의미의 창업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다음은 성장의 과정이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1년후 생존율은 63%, 5년후 생존율은 30%로 미국과 유로존 주요국 기업의 1년후 생존율이 75%, 5년후 생존율은 4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¹⁾. 다음으로 창업 기업의 성장도를 국가별 유니콘 기업²⁾으로 비교평가하면 2019년 가치(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세계의 유니콘 기업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글로벌 중견기업을 표현하는 히든챔피언 기업수의 경우에도 한국은 독일,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영국 등에도 밀리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의 생존률과 성장세는 높은 R&D 투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그것은 창업이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생업에 쫓겨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멸 또는 구조조정의 과정이다. 한 나라의 경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이 유지되면서 무한정한 창업이 지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기업에 투여된 자원들이 해체되어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에 활용 또는 흡수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혁신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기업의 소멸률(소멸기업수/총활동기업수 × 100)은 2018년 기준으로 11.8%

1)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역량 분석과 생존율 제고 방안”, KIET, 2018

2) 유니콘 기업(Unicorn)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로 창업률보다 낮다. 소멸률이 창업률보다 낮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좀비기업 즉 영업이 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기업중 35%가 좀비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반(48%)이 좀비기업인 상황이다.

결국 창업 및 신사업에 대한 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태되어야 할 기업들이 연명하면서 산업의 활력도를 낮추고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매우 높은 실패 비용이 창업 부진의 원인

그럼 창업 부진 이유부터 살펴보자.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중 “창업의 장애요인” 항목의 분포를 보면 창업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7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창업과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실패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비중도 약 70%에 육박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간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글로벌기업가정신³⁾ 조사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서 한국은 총65개국중 55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창업과정 및 실패시 발생하는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창업이라는 것은 매우 큰 위험성을 지고 하는 활동임에는 틀림없다. 아무리 창업에 따른 수익이 크다 할지라도 실패시 비용이 크면 창업에 도전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창업준비자가 느끼는 미래 삶의 불안정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 긴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3) 런던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과 미국 뱁슨칼리지(Babson College)가 매년 조사하는 글로벌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지수로 '16년 기준 65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평가

〈창업의 장애요인〉 (복수 응답 비율)

창업 장애요인	비중	비고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부재	9.3%	창업준비 부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	33.6%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	71.9%	창업자금 부족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44.1%	삶의 불안정성 관련
창업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의 경제활동 문제	25.7%	
기존 직업활동의 제한	1.3%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3.5%	기타
지인의 만류	4.3%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6.0%	
기타	0.2%	

주 : 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비고는 저자 작성

삶의 위기 속 노동자 저항이 구조조정 부진 원인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부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구조조정 시장의 미성숙, 경영인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따른 미온적 대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기업 부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책임만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구조조정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대책은 기껏해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 고용승계를 받아내거나,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도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영구적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준은 실직 후 6개월까지는 직전 월급의 75% 수준을 보존하여 OECD국 평균대비 높은 수준이

지만 1년 이후의 보장 수준은 20%에 불과해 OECD국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미래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있는 이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삶의 위험 공유를 통한 삶의 안정성이 경제 변화의 역동성과 성장의 원천

그럼 실패나 실업에 따른 두려움을 낮추고 혁신적 창업과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넓은 트램펄린에서 신나게 뛰놀며 매우 창의적인 몸동작을 하는 아이들을 보곤 한다. 그들에게 창발적 자유를 준 것은 바로 추락에 따른 위험 제거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제거는 더 나아가 추락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혁신적 창업 활동 역시 실패의 위험을 즐기고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어야 활성화되고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실패를 하더라도 안정적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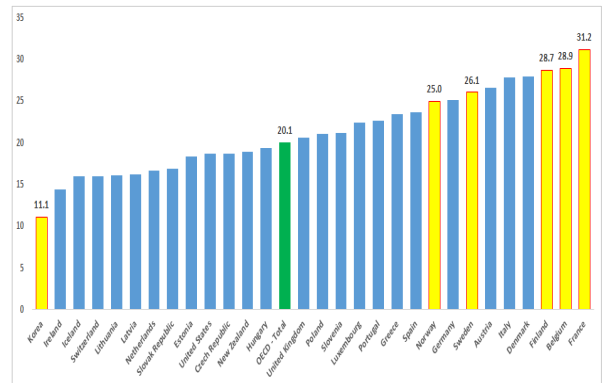
또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가 있다면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삶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산업의 창업, 성장, 퇴출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가지며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와 유럽 벤처기업의 성지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2018년 기준으로 GDP에서 공적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낮은 빈곤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적사회지출 규모가 OECD국가중 최하위권인 GDP의 10% 수준에 머무르며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효율과 평등”, “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혁신적 성장의 동력이 혁신에 성공한 자에게는 보상을, 실패한 자에게는 책임을 부여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경쟁적 시스템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시각

에서 사회적 복지의 확대는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해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ECD국가의 GDP대비 Public Social Spending 비율〉



자료 : OECD

〈OECD국가의 신생기업수 추이〉

	2007	2011	2015	2019
France	100	180	162	249
Sweden	100	161	164	157
Belgium	100	104	114	147
Norway	100	95	110	122
Netherlands	100	98	94	116
United States	100	100	100	110
Iceland	100	97	115	107
Finland	100	92	80	99
Japan	100	83	106	94
Denmark	100	78	100	92
Canada	100	93	81	82
Germany	100	96	83	78
Italy	100	93	87	78
Spain	100	60	67	66

자료 : OECD

주 : 2007년 신생기업수를 100으로 평가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단순히 정치적 분배의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선택행위에 자유를 줌으로써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냉혹한 혁신의 파괴적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약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삼성금융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